

“참사·변명 키우는 매뉴얼 정비를”

오늘 도의회 임시회 개회

강용구 도의원 “홍수조절에 대한 개념 파악 못해... 지역주민 민원 핑계로 일관 넓은 관료주의적 사고로 참사 더 키운 것... 재난상황시 소통 대응팀 필요” 주장



지난 8월 발생한 섬진강과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관계 법규를 무시한 채 55년 전 만들어진 매뉴얼과 영리 목적에 치중된 행보로 발생한 인재를는 주장이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2)에 의해 제기됐다.

“하천법”에 따르면 ‘홍수발생시 방류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홍수량을 저류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홍수발생시 공간확보를 위해 사전방류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댐 모두 사전방류가 없었고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운영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용구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로 천재가 발생했지만 댐을 운영·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이를 사전에 파악해 조치하거나 댐관리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1961년 설계 시점에 만들어진 매뉴얼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홍수조절에 대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지역주

민들의 민원으로 급격한 방류를 했을 뿐’이라는 변명과 핑계를 밝히지 않은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경보로 재난상황이 예상된 상황에도 영리 목적으로 물을 방류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최근 기상이변을 보면 이번과 같은 일이 이전보다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며 “재난 시 이전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댐 인근에 피해를 본 지역민들은 인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대처하지 못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데 홍수 대비를 위한 치수규정이 1961년 이후 단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에 허탈해하고 있다.

강용구 의원은 “댐 관리단이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해 매뉴얼을 준수했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매뉴얼 자체가 오래돼 변화된 환경과 맞지 않음에도 정비하지 않은 것은 넓은 관료주의적 사고로 참사를 더 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동화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이번 수해를 계기로 홍수기능 강화를 위해 저수위 하강조정 등을 통한 매뉴얼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피해가 컸던 남원의 한 시민으로서도 비교되는 두 기관의 행보에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미흡한 원인규명과 매뉴얼 전면개정 계획을 밝히지 않은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경보로 재난상황이 예상된 상황에도 영리 목적으로 물을 방류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최근 기상이변을 보면 이번과 같은 일이 이전보다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며 “재난 시 이전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댐 인근에 피해를 본 지역민들은 인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대처하지 못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데 홍수 대비를 위한 치수규정이 1961년 이후 단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에 허탈해하고 있다.

강용구 의원은 “댐 관리단이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해 매뉴얼을 준수했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매뉴얼 자체가 오래돼 변화된 환경과 맞지 않음에도 정비하지 않은 것은 넓은 관료주의적 사고로 참사를 더 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동화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이번 수해를 계기로 홍수기능 강화를 위해 저수위 하강조정 등을 통한 매뉴얼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피해가 컸던 남원의 한 시민으로서도 비교되는 두 기관의 행보에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간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수원 300MW가 개발 문제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수원 새만금태양광사업 지역상생 목적 어긋나”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위원들 “사업 재검토” 촉구 솔라파워 지분 구조 쏠림·참여 기업 적정성 문제도 지적

한국수력원자력들이 포함된 투자목적회사 새만금 솔라파워에 제공된 수상태양광 사업개발권(300MW)이 부적절하고 당초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목표인 ‘지역상생’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간협의회 민간위원들이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며 전북도민의 이익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간위원들은 “당초 이 사업은 새만금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한국전력의 전력망에 연결하는 계통연계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민간협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통연계비용 6,600억원을 한수원이 선부지한 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1/N 로 분담돼 되돌려 받게 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 솔라파워 지분 구조의 쏠림 현상과 함께 참여 기업의 적정성 문제도 지적됐다.

한수원이 주도해 설립한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이 81% 현대글로벌이 19% 지분으로 구성된 회사인데 현대글로벌이 솔라파워에 참여했을 때 아직 설립되지도 않았을 때이다”며 “한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고 촉구했다.

이와 위원들은 “한수원에 제공된 300MW 수상태양광 개발권은 전북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한수원이 부당하게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닌기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상태양광 시설공사 입찰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더욱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게 민간위원들의 주문이다.

민간위원들은 “한수원은 300MW 사업을 단일 공사로 진행하려 한다”며 “도내 기업이 참여가 매우 제한돼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목표 중 하나인 지역상생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 솔라파워 지분 구조의 쏠림 현상과 함께 참여 기업의 적정성 문제도 지적됐다.

한수원이 주도해 설립한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이 81% 현대글로벌이 19% 지분으로 구성된 회사인데 현대글로벌이 솔라파워에 참여했을 때 아직 설립되지도 않았을 때이다”며 “한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고 촉구했다.

이와 위원들은 “한수원에 제공된 300MW 수상태양광 개발권은 전북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한수원이 부당하게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닌기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상태양광 시설공사 입찰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더욱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게 민간위원들의 주문이다.

민간위원들은 “한수원은 300MW 사업을 단일 공사로 진행하려 한다”며 “도내 기업이 참여가 매우 제한돼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목표 중 하나인 지역상생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靑 “살아있는 공권력 보여 줄 것”... 전광훈에 경고

청와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를 받은 전광훈 사형제일교회 목사가 퇴원 후에도 정부를 향해 비난한 데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형제일교회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며 “방역 조치 협력을 고사하고 당차지 않은 무뎠음을 퍼뜨리면서 해방을 놓은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선량한 국민이 가게 문을 닫고, 울고 있거나, 한숨 쉬고 있다”고 했다.

또 “그간 묵묵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온 기독교계 목사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광훈 씨는 반성은 차치하고라도, 최소 미안한 시늉을 해야 하는 게 도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은 이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지시했다. 그 말을 다시 환기시켜드리고 싶다”고 했다.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뉴스

14일간 의정활동 본격화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등 27건도
거리두기 2단계 수칙 준수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7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본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2일 의정실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본회의장 참석자는 체온측정과 손 소독 등을 실시한 뒤 입장한다. 또한 의원들은 제안설명 등 발언 시

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 뒤 마이크 커버를 즉시 교체하는 등 방역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는 박희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4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전심사,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됐다.

이밖에도 ‘전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법규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 및 총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송지용 의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방역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75회 임시회는 16일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유호상 기자

홍성임 도의원, “국외소재문화재 조사·발굴 실태 조사단 필요”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성당 비례대표)이 전북도의 국외소재문화재 조사·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단 확충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성임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정부주도 문화재 환수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을 규정했다”며 “타시도(광역 7개, 기초 1개)의 경우 조례 제정 등으로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을 확충해 문화재청 등과 협업 구조를 만들고 있으나 전북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전북도 역시 실태조사단을 신속히 확충해 전북의 국외

소재문화재 현황 관리, 문화재 유출 경로 분석, 약탈된 문화재 반환을 위한 논리개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도 국외소재문화재의 전제적인 통계 관리 외의 본래 소재지 분류, 정확한 유출 경로 분석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또 “이미 실태조사단을 확충한 타 시도의 경우 연간 1억원 내외의 비용을 추계했다”며 “이는 문화재가 가진 문화·예술적 가치에 비해 매우 적은 비용이기에 실태조사단의 확충을 비용 논리보다는 당위성의 논리로 접근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임 의원은 3일 개최하는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노동자 보호 시급 대책은 해고금지”

진보당 전북도당 코로나19 재확산 따라

진보당 전북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 생계 위협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부 대책들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시급한 대책 중 하나가 ‘노동자 해고금지’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의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 통계를 보면 사업체 종사자는 1,844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8,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통계 작성 이래 올해 3월 처음으로 감소(22만 5,000명) 추세로 전환됐으며 5개월째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8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고용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전북도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전년대비 실업급여 신청자가 30%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심각하다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10월 해고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도 최악의 해고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었지만 이 지원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되면서 해고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기간을 연장했을 뿐 이렇다 할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보당 전북도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사회적 고통이 약자인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돼선 안 된다며 정부가 방역대책을 한 단계 더 격상한 것처럼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일차리 대책도 격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 학칙 따라 선발”

민주 김성주 의원 “법안 발의 이제 사회적 논의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논란에 대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법률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대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으니 이미 확정된 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확정되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들이 의무복무 후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 특채될 것이라는 “국립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일종의 사관학교로 졸업 후 계속 일할 곳은 공공의료분야이며 공공의료기관”이라며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므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문을 명확히 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공공의료대학원에 유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서 전공의 수련기간(5년)을 포함한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한다”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대전협 등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며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유호상 기자

김영명 의심되면 '1339'로